

전남대·조선대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 늘린다

입시업체, 26곳 대입 시행계획 분석

전남대와 조선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각각 의대 모집정원 80.0%, 70.0%를 지역인재에 할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수도권 의대의 전체 평균(63%)를 크게 웃도는 비율로, 광주·전남지역 의대 지방생들에게 그만큼 문호가 넓어지는 셈이다.

1일 종로학원이 전날 오후 10시까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 2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63.2%인 223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토대를 둔 용어로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고교에 입학해 졸업

전남대, 정원의 80%·조선대 70%...비수도권 평균 웃돌아

"지방 학생 유리해져...수시·정시 합격선 동반 하락할 것"

한 학생이다.

각 대학은 매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날까지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증원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엔 당초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4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전형으로는 2025학년도 모집정원 확대 전 발표 기준 850명에서 2026학년도 1759명으로, 선발 규모가 2.1배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 전형 선발은 같은 기간 221명에서 479명으로 2.2배 증가한다.

2026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학별로 보면, 전남대는 전체 선발인원 200명 중 160명(80.0%), 원광대 150명 중 120명(80.0%), 부산대 200명 중 151명(75.5%), 경성국립대 200명 중 147

명(73.5%), 조선대 150명 중 105명(70.0%), 동아대 100명 중 70명(70.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은 충남대(73.6%), 경성국립대(73.5%), 조선대(70.0%), 경북대(66.7%), 인제대(62.5%) 순으로 높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는 의대선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80%대까지 올릴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선발 수치를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순천향대, 울산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7개 사립대는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전형에서는 전남대(89.0%), 부산대(87.5%), 원광대(84.5%), 동아대(83.3%), 순천향대(82.8%) 순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

았다.

반면 한림대(21.0%), 연세대(미래·30.0%), 가톨릭관동대(45.0%) 등 3개 사립대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 의대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방권 학생의 의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든 2025학년도보다 2000명 증원이 적용된 2026학년도엔 이 같은 합격선 하락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아직 미확정 상태여서 변수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의대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수시, 정시 모두 모집정원 확대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동자들의 외침 134주년 세계노동절인 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헌재 '주민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유지

"기본권 덜 제한하는 수단"...지문정보 경찰 사용엔 의견 갈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5년과 2015년에도 이에대한 위헌소송이 제기 됐지만, 헌재는 당시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영 재판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넣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심리에서는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과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3명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각하를 제외하고는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났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GGM 노조, 민노총 가입... "6월 단체교섭 나설 것"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

1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금속노조 가입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조성된 2개(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 GGM노조)노조 중 2노조였던 GGM노조가 지난달 22일 금속노조로 전환한데 이어 1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전날 진행된 조합원 총회 투표결과에 따라 금속노조로 전환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조합원 총회 투표결과 92.3%가 금속노조 가입에 찬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광주글로벌모터스 제1기업노조와 제2기업노조는 모두 금속노조에 합류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조·무파업을 약속하고도 노조를 만들어 약속을 파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노조법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한달 내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를 출범하고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을 위한 조합원 공청회, 단체교섭 등을 진행한다. 또 6월에는 단체교섭을 본격화해 준비위원회가 아닌 정식 노조의 형태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로 기획된 4대 의제(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가 실종된 것은 논의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된 때문"이라며 "4대 의제와 민주적 노사관계가 형성되려면 튼튼하고 합리적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공영장례 무연고자에 전면 확대

광주시 동구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자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를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지자체가 장례비와 장례용품, 인력, 장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동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한해 공영장례를 지원해왔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자는 시신 처리만 지원하고 장례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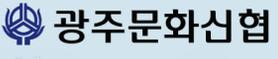
동구는 최근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무연고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구는 오는 3일 '광주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동구 조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 무연고자에게도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26일 동구의회를 통과했다.

동구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데 맞춰 무연고자를 위한 분향소 설치 방안, 장례비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